블랙리스트의 흑과 백 …'법꾸라지' 獄으로 '신데렐라' 집으로

"수갑 풀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연루자들 1심 판결

김기춘 '권력 남용' … 조윤선 '허위 증언'

박근혜·최순실의 지시·공모는 인정 안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블랙리스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영화·도서 부문 지원배제' 혐의 등을 판단하면서 일부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보면 각각의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증거의 상당 부분과 주요 증인이 중복되는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이행 의지

칼자루 쥔 국회의원들이 결단해야

지방분권 개헌

〈4〉'분권 제도화' 시험대

지방분권은 제도화로 완성된다. 정권교체나 일시적인 여론변화에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선 정치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정치인들이 움켜쥐고 있는 탓이다.

지방분권이 쉽지 않은 이유는 신세를 져야 할 정치를 상대로 혈투를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정치로부터 팔과 다리를 잘라 와야 지역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적어도 지역민의 삶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역에 있어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나눠준 적은 없다. 지방분권의 성패는 정치분권 실현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지방분권개헌 약속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체계인 헌법에 지방분권 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헌법개정안 발의권자인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분권개헌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이행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의 호의적인 분위기와 달리 국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회의원의 특권 또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권능을 지역과 나누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불쾌감마저 표시하고 있다.

▲칼자루 쥔 국회의원 '밥그릇' 방어

현역 국회의원의 심기를 건드린 내용은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며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한다 △헌법기관에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조항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방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수직적인 권력분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의사결정을 지체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이 옥상옥(屋上屋) 역할을 하면서 기존 국회의원의 위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인구 5000만명 규모의 단일민족국가에서 굳이 양원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안 손질과정이 관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또, 국회가 국민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거나 작동하지 않고, 개선의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최종적인 주권자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을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대의제의 근간인 책임정치가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지방분권 개헌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미진할 경우 자칫 개헌안의 국회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제외한 선언적 조항들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개헌논의는 국회가 주도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은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손질할 국회의원"이라며 "무턱대고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끝〉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유광준 매일신문 기자

무안출발 일본여행

올 여름 휴가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여름기간 : 2017년 7월 28일(금)~9월 21일(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 부터 (8/1, 8/5, 8/11)

북큐슈 4일 699,000원 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 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 부터

큐슈 · 오카사 4일 단, 한번! 799,000원 부터 (8/28)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지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실속] 북큐슈 898,000원 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 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 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 부터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간(3박5일)

8/7(월) 단, 1회! 특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6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 부터

7/21(금)~8/20(일)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날짜와 인원 수에 따가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